

2003

vol.1

정의의 종

S N U L a w M a g a z i n 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Contents

발간사

특집 1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간다.특집 2
공익과 인권을 향하여

동문인터뷰

- 02 ■ 「정의의 종」 창간을 맞이하여... (안경환 학장)
- 04 ■ 송상현 교수,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 선출
- 06 ■ 국제법 모의재판팀, 제섭(Jessup) 국제법모의재판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올려
- 08 ■ 동아시아 법학도의 연대, ALSA Korea
- 10 ■ 서울법대, 외국인 초빙교수 금년부터 선발예정
- 12 ■ 「공익과 인권」을 위한 싱크탱크의 발족 : 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 설립과 활동
- 16 ■ 「인권법」 강좌가 개설되다 : 정인섭 교수와의 인터뷰
- 19 ■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만나다
- 26 추모 ■ 故 유기천 교수 추모식 및 출판 기념회
- 28 초점 ■ 법학교육의 개선방안 – 백충현 서울대 대학원장에게 듣는다
- 30 법대생 커뮤니티 ■ 서울법대 장애의 벽 걷어낸다 : 손위용, 김용광 교수의 입학
■ 장애인인권연대사업에 참여하면서
■ 성희룡·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교수-학생 간담회
- 35 동정 ■ 「자랑스런 서울 法大人」 시상식
- 36 법률에세이 ■ 엘리트, 죽일 것인가 키울 것인가(호문혁 교수)
■ 아일랜드 대기근과 기억의 역사(한인섭 교수)
■ '八姦' 을 경계하십시오(조국 교수)
- 41 책풀이 한마당 ■ 저자 인터뷰 : 최종고 교수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
■ 문화관광부 '2002 우수학술도서' 선정
–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 「한국근대법사고」
■ 2002년~2003년 상반기 서울대 법대 교수들의 저작활동
- 48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 ■ KAL기 참사, 故 김도연(金度演)군 유족
서울대에 거액 장학금 출연
■ 강의실이 확 바뀌었어요
– 어느 독지가의 서울법대 사랑 이야기
■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SNU Law Magazine 제 1호 발행인 : 안 경 환 편집 : 한인섭, 조국, 김영진 발행일 : 2003년 6월

발행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74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

창립 아래 우리 서울법대는 나라의 근대화와 법치사회의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천하제일'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동문 인재들이 법조계는 물론 나라 전체의 공, 사의 영역에서 빛나는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법대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유린한 극동의 작은 나라, 연간 국민소득 몇십 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세계의 경제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였듯이, 우리 대학도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해야 할 절실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내 제1의 대학이라는 자부심마저 열악한 교육여건과 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정책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영화에 고만하지 말고 오히려 질책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수준의 법과대학,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재정적 투자가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법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정의의 종」 창간호는 서울법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알림으로써 동창, 학부모, 후원자, 그리고 서울법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국민들 사이에 정보의 가교를 놓기 위한 작은 시도입니다. 「정의의 종」 창간호는 서울법대의 발전을 위해 의미깊게 내딛는 첫걸음이며 '천하제일' 이란 이름에서 벗어나 세계의 명문 법과대학들에 견주어 전혀 뒤쳐지지 않는 서울법대로 도약할 수 있게끔 초석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책자의 발간을 위해 수고해준 원고 작성자 및 편집위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의의 종」 창간을 맞이하여...



「정의의 종」 창간호는 서울 법대의 발전을 위해 의미깊게 내딛는 첫걸음이며 '천하제일' 이란 이름에서 벗어나 세계의 명문 법과대학들에 견주어 전혀 뒤쳐지지 않는 서울법대로 도약할 수 있게끔 초석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3. 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우회 韓大法大校友會



특집 □ |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간다.

송상현 교수,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 선출

국제법 모의재판팀, 제섭(Jessup) 국제법 모의재판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올려

동아시아법학도의 연대, ALSA Korea

서울법대, 외국인 초빙교수 금년부터 선발예정



송상현 교수,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 선출

서울대 법대 송상현(宋相現·61)교수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등 중대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사회에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고, 금년 3월 11일부로 공식 출범했다.

송상현 교수는 지난 2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18명의 초대 재판관을 선출하는 ICC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85개 당사국 중 63개국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1차 투표에는 43개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후보로 나섰으며 투표결과 송상현 교수를 포함하여, 아일랜드, 말리, 브라질, 가나,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후보 등 7명이 선출되었다. 재판관 선거는 이후 무려 33차례의 투표를 거쳐서야 18명의 재판관을 모두 뽑을 수 있었다. 여성 6명, 아시아-동유럽 각 2명, 서유럽-아프리카-중남미 각 3명, 형사법 분야 9명, 국제법 분야 5명 등 성별·지역별·전공별 “최소기준”이 채워질 때까지 끝 없이 재투표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선출 과정에서 송상현 교수 가 1차에 당당히 선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

지금까지 일부 국제 재판소에서 한국인이 재판관으로 뽑힌 사례가 두세 차례 있었지만, ICC 같은 비중있는 국제재판소에서 한국인이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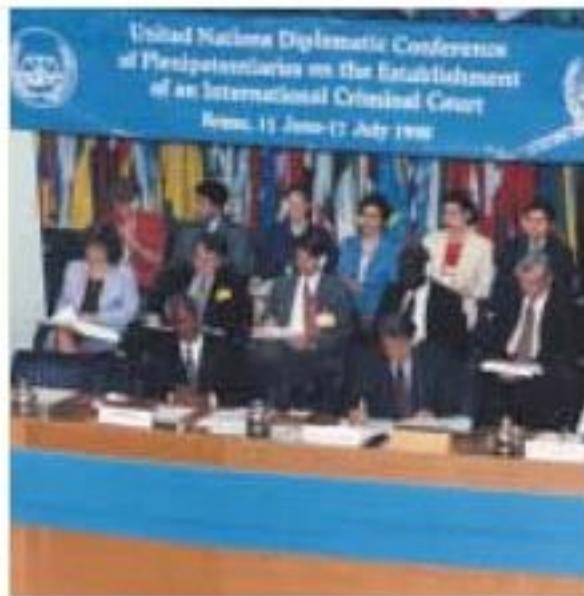
해 송상현 교수는 “총체적으로 국력 신장의 덕”이라고 말했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송상현 교수의 ICC 재판관 선출에 대해 “우리나라 법학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사건”이라며 기뻐하고 있다. 안경환(安京煥) 서울법대 학장은 “지금까지 일부 국제 재판소에서 한국인이 재판관으로 뽑힌 사례가 두세 차례 있었지만, ICC 같은 비중있는 국제재판소에서 한국인이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승주(韓昇洲) 고려대 총장, 이세중(李世中)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학장 등 각계 저명인사 100여명은 작년 12월부터 송 교수의 후원인으로 나서 국제적 인맥을 통해 송 교수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김대중 前대통령에게 축하인사를 받고 있는 송상현 교수(2003년 2월 13일-연합뉴스 제공)



송상현 교수는 상법과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와 미국 휴스턴대에서 법학석사를 받았으며, 미국 코넬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상현 교수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도 합격하였으며, 1972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30여년 동안 재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미



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1년에 2~3개월씩 한국법을 강의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송상현 교수는 ICC 재판관 선출 후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법과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법을 전공한 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인 ICC 재판관에 선출돼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그보다 우리 외교와 법조 인력이 국제적으로 인증받고 있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이 자국민의 ICC 피소를 막기 위해 주요국과 양자 협정을 추진 중인데 대해 “미국은 세계 각국에 주둔군과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있어 ICC의 관할권에 복종할 경우 저촉되는 사안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자국민에 면소권을 부여하려는 미국의 양자 협정은 평등한 법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상현 교수는 “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류 범죄 등 ICC가 취급하는 국제범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앞으로 판결을 할 때 여성과 어린이의 권익을 더 강하게 옹호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하며, 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어디

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이번 일이 돌파구가 되어서 앞으로 후배 학자들도 국제기구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진구 기자

서울법대 교정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송상현 교수



국제법 모의재판팀, 제섭(Jessup) 국제법모의 재판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올려

서울법대 국제법모의재판팀(김태운 [현재 법3], 이국희[현재 법2], 이해민 [현재 법2], 임유현[현재 법2])이 2003년 3월 30일에서 4월 5일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섭(Jessup) 국제법모의재판 세계경시대회에서 90여개국 지역 우승대표팀들과 경쟁하여 20위를 달성하였다. 제섭(Jessup) 경시대회는 1960년에 미국 국제법학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특히 법학에서의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불리울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섭(Jessup) 국제법모의재판 세계경시대회에서 20위를 달성하였다.

각국에서 온 제섭(Jessup) 팀들간의 순위가 매겨지는 경위를 살펴보면 4승 팀, 3승팀, 2승팀 순으로 나열한 후 총점에 따라 다시 그 안에서 순위를 매긴다. 서울대 제섭팀은 3승 1패라는 성적을 거두었는데, 1패를 하였을 때 대적한 팀이 베네주엘라팀이었다. 베네주엘라는 전통적으로 제섭모의재판대회에서 남미 국가들 중 가장 강세를 보이는 국가였

서울대학 국제법모의재판팀이 법학에서의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불리울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섭(Jessup) 국제법모의재판 세계경시대회에서 20위를 달성하였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을 견학중인 각국의 제섭 참가학생들



다. 참가학생들(이국희, 이해민, 임유현)은 인터뷰 중간에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판사들이 산정한 총점은 4승을 했던 두 팀의 점수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것 같다.

2003년 제섭 참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실제 도착해서 보니 실력차이가 정말 간발의 차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잘 해야겠다는 욕심도 나고 이전의 서울대 제섭을 했던 선배들이 한 말도 실감이 나고요. 이번 4월 말에 제섭에 참가할 후배들을 선발하고 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최고의 결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 줄 겁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후배들을 괴롭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003년 제섭 참가학생인 이해민은 “제섭에 강한 다른 학교를 보면 제섭을 위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제섭팀을 지도하는 전문적인 코치가 있어요. 물론 이전의 서울대 제섭팀의 선배들이 워낙 잘 해주기는 하지만요. 제도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배들이 도와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배들이 제섭팀 면에서 양식을 가르쳐 주거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저희들과 함께 사안을 분석하고 고

민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다른 학교는 제설팀의 코치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지만 우리 제설팀을 지도해 주는 선배는 순전히 자비로 대회장까지 가야 하거든요.”

참가학생인 이국희 학생은 2003년 제설팀에 합류한 이후의 과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월에 제설팀으로 선발되고, 여름방학에는 법률에 관한 기본교과서를 읽고 9월에 문제를 받은 이후에 사안을 분석하고 참고문헌 등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1월에는 변론서를 작성하고 2월에는 구두변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월말에는 본격적으로 국내전(고려대와의 대회)을 준비하였으며 3월에는 국제전을 준비하고 4월 초에 국제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대팀의 변론서는 대회 시작 바로 전날 받아 보았습니다. 상대팀의 법논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회 전날에는 밤을 꼬박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의 법논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대 제설팀 네 명이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개별적인 프리젠테이션 연습도 계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제대회 시기에 참고문헌을 더 수집하는 일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변론연습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대회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제설팀 참가자 네 명 가운데 두 명은 원고가 되어 변론하고 다른 두 명은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되어 변론한다. 최종적으로 네 사람의 점수를 합산하여 팀들간의 순위를 정한다. 제설팀의 국제재판대회에서 배부하는 사안은 국제법상 명확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부분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가자들은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를 하여야



제설팀 모의재판 예선전 종료 후 각국의 학생들과 전통의상 파티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한다. 그리고 국제법에 관한 다양한 판례들을 원용하여 자기가 정립한 이론을 정당화하여야 한다. 모의재판의 판사들은 양측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주장과 이론, 원용근거들을 판단하여 승소팀과 패소팀을 결정한다.

임유현 학생은 대회 이후에 느낀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적 사안 하나를 붙들고 1년여에 걸쳐 분석하면서 어느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공부는 나 혼자 잘 하면 되는 것이었는

데, 제설팀에서는 팀웍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한 사람이 어느 부분에 대하여 미진하게 공부하였다면 넷이 그 부분을 나누어 보충하여야 합니다. 모의재판대회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실제 국제 재판에서는 순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판사님들이 저희들이 고민하였던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공부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론을 하는 동안과 그 직후에는 한편으로는 긴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기간은 힘들었는데 정작 대회에서 변론을 할 때에는 참 즐거웠어요.”

제설팀 참가학생들은 이상면 교수와 이전의 제설팀 선배, 그리고 자금지원에 힘써주신 백충현 교수와 정인섭 교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

정민정 기자

좌측부터 우리 법대의 이혜민, 임유현, 이국희양과 제설팀 모의재판 참가 판사 3인 및 인도 대표 2인, 그리고 우리 법대의 김태운 군



동아시아 법학도의 연대, ALSA Korea

아시아법학생연합(The 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 이하 ALSA)은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아시아 각 국의 법과대학생들의 모임을 마련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네트워크 형성, 즉, 국제적, 국내적으로 학생 간의 또는 학생과 법조계간의 인적인 망을 구축하여, 앞으로 다가올 국제사회에 장래의 법조인으로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ALSA Korea가 발족된 것은 2000년 8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10개 가맹국 중에서 7번째로 만들어진 셈이다. 그리고 이 10개국을 모두 망라한 통합적 단체가 합의되어 발표된 것은 작년 9월 동경에서의 제 2회 아시아법학생포럼에서이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내적으로는 ALSA의 구조를 다져나가면서, 대외적으로는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흡수하여 “아시아”라는 이름만으로 동질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더 깊은 상호교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ALSA에서의 활동은 크게 국제활동과 국내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활동은 국내의 법대생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학술능력을 개발한다는 의미에

ALSA KOREA의 발족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법과대학 학생들간의 인적인 망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국제사회에 장래의 법조인으로서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 태화궁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ALSA Korea 회원들



서 국제활동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를 연구하고 많은 법조계의 인사들과 접촉함으로써 법률사회에서의 책임감과 자신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국제활동에 치우친 바람에 국내활동을 소홀히 했는데, 올해부터 학생들의 토론실력을 겨루는 Debate Competition과 부산대학교에서 이라크戰에 대한 평가를 공개토론회 방식으로 하는 등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법률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전토론회를 거쳐 그 기관을 방문하는 등 우리 법대의 참가학생 대표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 친목도모와 동시에 같이 일하고 배울 수 있는 활동도 마련함으로써 딱딱한 단체로 굳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제활동은 크게 국제회의와 Study Trip으로 이루어진다. 국제회의는 주제에 따라 여러 번 개최될 수 있으나, 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각 국의 대표가 모여 토론을 하는 자리를 포함하는 정기회의는 그 개최국을 선정하여 1년에 한번씩 이루어진다. 2003년 올해의 경우 이 정기회의에 해당하는 제 3회 아시아법학생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회의에는 이러한 대표자회의 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그 회의의 주제 중에

서 소주제를 선택하여 소그룹별로 국제적이고 법적인 쟁점을 토론하고 강연자로부터 강연도 받는 식의 학술회의에 참여하고, 개최국에서 마련하는 문화교류에도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제 1회 아시아법학생포럼을 개최하였고 2002년에는 정기회의는 아니지만 Korean Conference 2002를 서울대학교 호암관에서 개최한 경력이 있다. 그밖에 International Forum이나 아세안법학회와 같은 회의를 개최하는 다른 나라에도 꾸준히 5명에서 10명의 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유럽의 ELSA와 미국의 ILSA와의 관계도 수립이 되어 그 쪽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초대를 받고 있다. Study Trip도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되지만 두 국가가 상호교환하는 1대 1 방식이므로 훨씬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비공식적이므로 편하게 1주일 동안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미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특히 Study Trip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일본과 Study Trip을 실시하고 있어 올해 8월에는 교토로 15명 정도의 학생을 보낼 예정이다. 그밖에 우리나라와 이런 단독적인 Study Trip을 했던 나라에는 홍콩과 싱가폴과 중국이 있다.

원스턴 처칠이 “Asia is just a geographical term”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시아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이름만 공유하고 있을 뿐 그 동안 경쟁자로만 느껴지고 동질감을 느끼기 힘든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관계는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인종, 역사, 사회, 경제, 정치가 모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ALSA Korea 회원들

도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비교함으로써 얻는 지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끊임없는 경쟁과 무관심의 사회로 남아서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 나라는 세계에서 그 위치를 확립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대생으로서는 법률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를 초기에 형성시키고자 이상을 가지게 된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서울법대의 학생들뿐 아니라 여타 한국의 법대생과 법조인들을 자극시켜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

김현지 기자

일본 포럼에서 일본 변호사 협회를 방문한 ALSA Korea 회원들



서울법대, 외국인 초빙교수 금년부터 선발예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최근 정식 외국인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채용 예정 인원은 총 3명으로 영미법, 유럽법, 일본법을 전공하는 학자를 대상으로 이번 2학기부터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섭외 중이다. 국내 법과대학에서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정규 교과를 강의하게 하는 첫 시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계수하고, 현재는 규제법 등의 분야에 영미법의 법리를 많이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학계와의 교류는 다소 미진했으며, 법대 학생들도 이에 대해 깊게 배울 기회가 부족했다. 또한 같은 동아시아권의 일본과는 법체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교류의 폭이 좁았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법학자를 통해 외국 법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우리 법학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외국인 교수 채용의 목표다. 이번 초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인 교수 초빙 지원 방침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서울대 법대는 영미법을 전공하는 학자와 유럽법 전공자, 일본법 전공자를 각 1명씩 초빙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에서 정년 보장을 받은 저명한 법학자를 섭외하여 심도있는 학문적 교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들은 각자의 전공법의 대학원 강의를 맡

이름을 밝히기 사양한 국내 한 법무법인이 '서울대 법대 국제화 추진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법대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액수(약 6300여만원)를 3년간 지원하기로 하여 3명의 외국인 교수의 초빙이 가능하게 되었다.

는 이외에도 학부 과정의 '영미법 강독', '독일법 강독', '프랑스법 강독' 수업을 해당 언어로 직접 강의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단순한 강독에 머물렀던 수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대는 이 외에도 기본법의 일부 강좌를 외국인 교수로 하여금 강의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수들과의 학술 교류와 함께, 법대의 영문 저널인 'Journal of Korean law'의 편집 위원으로도 참여하게 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있어서의 자문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보수는 6~8만 달러 정도이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 행정본부 그리고 법대가 분담하게 된다. 법대는 부족한 재정으로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름을 밝히기 사양한 국내 한 법무법인이 '서울대 법대 국제화 추진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법대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액수(약 6300여 만원)를 3년간 지원하기로 하여 본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안경환 학장은 "우리가 외국법을 배우는 동시에 외국 법학자들이 한국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으로써 한국법에 대한 외국 법학자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교수 초빙이 법학의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대에서는 학문의 국제적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고 있으며, 경영대의 경우에는 이미 2명의 외국인 교수가 정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경제학부 또한 최근 저명한 경제학자를 초빙하여 정규 교과목을 강의하게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대는 아직까지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정규 교과목을 맡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국제화에 다소 뒤쳐져 있었지만, 이번 외국인 교수 초빙을 계기로 일대 전환을 겪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외국인 교수 채용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 충원,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법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한대웅 기자

특집 ② | 공익과 인권을 향하여

「공익과 인권」을 위한 싱크탱크의 발족 :

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 설립과 활동

「인권법」 강좌가 개설되다 :

정인섭 교수와의 인터뷰



공익과 인권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을 위한 싱크탱크의 발족 : 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 설립과 활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공익과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 설립 개요와 그 활동에 대한 소개이다.



1. 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 설립

법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공익과 인권의 신장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법과대학에서 그에 대하여 연구, 실천하는 학풍이 조성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 교육연구단'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의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에 법과대학에 공익인권법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이하 공익인권법센터로 약칭한다).

공익인권법센터는 한국사회에서의 공공이익의 증진과 인권보호의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공익 및 인권과 관련된 기존법제와 관행의 재검토, 새로운 법제의 강구, 외국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발족 이후 공익인권법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2003년 5월 현재까지 여섯 번의 학술회의를 열었음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문제가 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술회의의 성과를 모으고 자료를 보충하여 네 권의 〈공익과 인권〉 단행본을 출간하였기 때문이다. 단행본의 출간을 통해 소중한 논의의 결과가 1회성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공익과 인권에 대한 현재의 척박한 연구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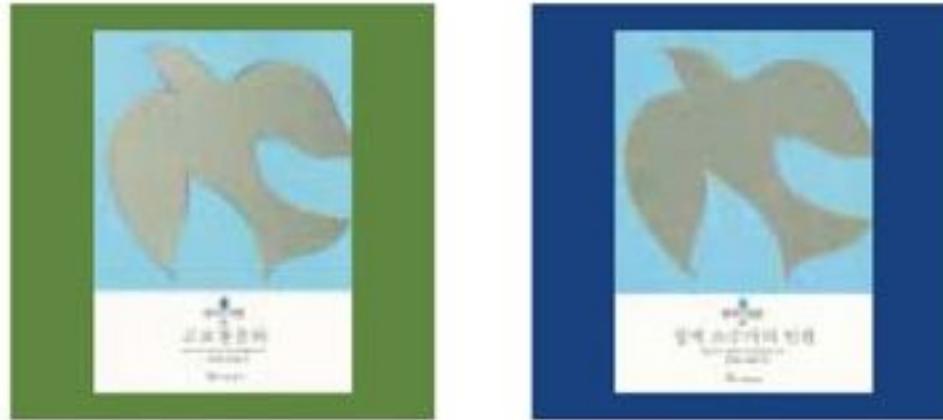
2. 공익인권법센터의 활동 I

- 학술회의 및 단행본 출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학술회의와 그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1년 12월 10일,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있었다.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공론화와 법적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지금도 특별한 상황변화는 없다. 학술회의에서 조국 교수(현 서울대, 당시 동국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발표에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그것이 병역기피나 종교적 이단으로 처리될 수 없는 우리 법의 핵심적인 관

제로 2002년 첫 학술회의를 열었다. 2001년 11월 경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야 하나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술회의에서 정인섭 교수는 “재외동포법의 근본적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재외동포법이 국제인권규약과 인종차별철폐규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좀더 장기적 안목의 교포정책 추진의 바탕이 될 새로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재외동포법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 관하여는 외국인 처우 개선과 연계하며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국내법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종훈 연구관(국회)은 “재외동포법 개



심사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법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복희 교수(현 카톨릭대, 당시 BK21 계약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 발표에서 각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의 실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김병렬 교수(국방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에서 우리의 특수상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적 문제점과 대체복무 도입의 현실적 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한인섭 교수와 김재형 교수의 헌법적·형사법적 검토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증언, 타이완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자료 등을 추가하여 2002년 2월에 <공익과 인권> 시리즈의 첫 단행본으로 사람생각 출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2002년 4월 12일, <재외동포법의 재검토>를 주

정론과 폐지론의 합리성 검토” 발표에서, 해방 이전 해외 이주민 곧 재중동포 등에 대한 우대 당위론은 과거에 일제가 행한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 혈통주의적 표현을 피하면서 모든 동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야 하며, 중국정부와의 마찰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진영 교수(경희대)는 “재중동포 관련 쟁점에 관한 대 중국 적극적 외교방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법개정보다는 한-중간 조선족 문제를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2002년 6월 발간된 <재외동포법> 단행본에는 발표 및 토론 이외에 재외동포법의 제정, 개정논의 등에 관한 관련자료를 실었다.

한편 공익인권법센터의 관심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직접 당사자로 겪는 교육문제에도 미친다. 고등학교 평준

화제도(및 무시험입학제·학군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내지 입학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헌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이 제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표실현의 수단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과연 적절한 제도이냐에 관한 의문과 함께 제도의 시행 초기에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고교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과행과 부조리 및 비리는 이를 증폭시켰다. 그 결과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오늘 날 가장 뜨거운 사회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에 공익인권법센터는 '살아있는 법'을 지향하여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헌법적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이 헌법적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변수 및 그 실태에 관한 논의를 2002년 6월 11일 개최한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

인권>을 내걸고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을 때, 우선 무엇이 문제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동성애, 양성애, 성적 전환자의 문제 등 이성애와 다른 다양한 스펙트럼상에 놓여있는 성적 지향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문제거리가 되고, 성적 소수자들이 어떤 곤경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법률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학술 대회의 발표와 토론의 성과를 정리하고, 序章 격에 해당하는 BK21 양현아 계약교수의 "성적 소수자: 법사회학적 쟁점과 전망"을 더함으로써 2002년 12월 <성적 소수자의 인권> 책을 묶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국내자료로는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사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실었으며, 해외 동향으로는 트랜



토> 학술대회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 발간한 <고교평준화> 단행본에는 학술회의에서의 발표문을 보완해서 실었으며, 회의에서의 토론내용을 덧붙이고 부록으로 관련법령 및 조약,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등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인권법센터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지만 다수가 아니므로 소외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조망하였다. 최근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의 물결을 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2항에서는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성향차원으로만 취급되던 '성적 지향'이 드디어 시민권의 지위를 확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공익인권법센터가 2002년 10월 7일 <성적 소수자: 차이, 차별,

스젠더, 동성애자의 파트너십, 임양, 군대복무 등에 관한 각국의 판례 및 결정, 법안의 요지를 실었다. 책 말미에는 정궁식 교수의 "우리 역사에서의 非異性愛-사방지"도 추가하였다.

2002년 12월 10일, 고 조영래 변호사의 12주기를 추모하면서 공익인권법센터는 2002년 마지막 학술회의로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취약집단의 보호>에 관하여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소수자들이 어떤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지에 관하여 조국 교수가 성폭력피해자, 정규원 교수(한양대)가 정신장애인, 최병각 교수(동아대)가 아동, 김성근 변호사가 외국인 노동자로 나누어서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3년 4월 18일, 공익인권법센터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주제로 2003년 첫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향,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인시위, 사이버시위, 외국공관 내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등에 관하여 김도형 변호사, 김승환 교수(전북대), 정인섭 교수, 정찬모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취약집단의 보호〉 단행본은 사람생각 출판사에서 5월 말 출간 되었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출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공익인권법센터는 〈성매매 피해여성과 법적 대응〉을 주제로 2003년 5월 23일, 2003년 두 번째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3. 공익인권법센터의 활동 II

- 심포지움, 집담회 등을 중심으로

공익인권법센터가 지금까지 개최하였던 학술회의와 단행본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하였으며, 그 외의 다른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1) 한일공동연구회

한일공동연구회는 '21세기 동북아시아 평화·안전보장정세의 변화와 한일의 안보·치안법제의 구조'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학술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일본 의회에서 유사법제(有事法制)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한일학자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는 큰 의미가 있다. 공익인권법센터 소속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본 연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발제 및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일본학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 제 1회 한일공동연구회 : 〈군사주의와 인권〉 심포지엄, 2002년 10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 2회 한일공동연구회 : 〈유사법제와 국가긴급권에 관한 신고찰〉, 2003년 2월 17일, 일본 교토 立命館대학 수학관 제 1연구실

(2) 집담회 개최

2002년에 4회, 2003년 5월 현재 3회의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집담회의 성과를 학술회의의 바탕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 인권연구의 연속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2002년

- 제 1회(2002/3/29): 조이여울(여성신문 기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실태"
- 제 2회(2002/5/10): 이배근(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아동학대의 현황과 그 제도적 대응 모색"
- 제 3회(2002/10/28): 김현선(새움터 대표):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 및 법률적 문제"
- 제 4회(2002/11/25): 김강자 총경(치안본부 여성청소년과장): "성매매의 현황과 대책 모색"

2003년

- 제 1회(2003/1/9): 정강자(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변호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대학내 인권법연구소의 역할 I"
- 제 2회(2003/2/10): 차병직(변호사), 조효재(성공회 대), 박석운(노동인권센터소장): "대학내 인권법연구소의 역할 II"
- 제 3회(2003/5/16): 최대권(서울대 명예교수), 박명규 교수(서울대), 이철우 교수(성균관대): "재외동포법의 개정방향"

그 외에 제 2회 세계난민의 날 기념 워크숍(2002년 6월 19일: "한국의 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 외국학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Foreign Authority Forum 등 한국사회에서의 공공이익의 증진과 인권보호의 강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최준혁 기자

「인권법」 강좌가 개설되다： 정인섭 교수와의 인터뷰

2003년 1학기 때부터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인권법”이라는 명칭의 강좌가 개설되어 현재 40여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다. 그동안 학부 차원에서의 인권법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번 인권법 강좌 개설은 기존의 타 대학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인권교육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인권법 강좌의 담당교수인 정인섭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자: 인권법 강좌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인섭 교수(이하 정): 기본적으로는 뭐 법과대학에서 배우는 거 자체가 인권의 보장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국제법 등에도 인권보호 주제는 많이 있겠죠. 다만 이번에 개설된 강좌는 강좌명 자체가 ‘인권법’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단편적인 것들을 한데 모아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인권법 강좌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권법과 기존의 강좌들의 차이가 뭐냐는 의문이 생길 것 같네요. 나는 인권법 강의 시간에 다른 과목에서 다루었던 인권보호 주제들을(예를 들어, 형소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같은)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따라서 다른 과목들에서 취급을 잘 하지 않는 주제들을 새

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회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자: 사실 많은 이들이 인권교육을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권법 강좌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 인권에 대한 개별적 이야기는 각 법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 과목에서 나눠서 배우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형법상의 인권보호, 헌법상의 인권보호 등을 따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자신의 인권보호를 생각하게 되죠. 처음에는 항의를 해볼테고, 다음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것도 안되면 국

제사회에 호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각각 다른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곳에 널리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학문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권법이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인권법 강좌에서 기존의 학문들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강의들 중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문제(초, 중, 고 학생들이나 비법대학생들을 위한 인권교육)를 다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옳겠죠.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틈새'의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강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존의 '틀'이 없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주제 선택과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권법 강의의 특징

에 따라서 신설되어야 할 강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준에 자꾸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 인권법 강좌를 통해 서울 법대생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인권교육은...

정: 음... 대부분의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나름대로 어떤 이상이나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두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죠. 그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결국 누구를 법적으로 돋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가진 자를 돋는단 말이죠. 변호사도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이런 강좌를 통해 매스컴을 통한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인권 의식이 조금이라도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사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법 강의의 필요성은 수 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대 법학과에서 이제 와서야 강좌가 개설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 그것을 옛날에는 정치적 이유를 대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나는 그게 매우 간단한 이유라고 봐요. 서울대학교 규정에 개설과목 제한이 있죠. 인권법 강좌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 하나를 빼고 개설을 해야 하는데, 내가 봐도 법과대학의 과목들 중에서 뺄 것이 거의 없어요. 민법을 빼고 대신에 인권법 강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강좌개설이 늦어진 것 이죠. 사실 인권법 말고도 시대의 변화와 학생들의 수요

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대 졸업생들의 97, 98% 이상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해방 50년 이후, 서울 법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 것에 비해서 그동안 서울 법대는 공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을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만큼은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를 통해 매스컴을 통한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인권의식이 조금이라도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한 해 졸업생 중 단 3명이나 5명이라도 그런 공적인 일에 봉사하는 졸업생이 나온다면, 서울대학교나 서울법대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일년에 1, 2명도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기자: 사실 인권법 강의개설 당시, 교수님이 국제법 강의를 해오시던 분이라서 인권법 강의 역시 국제적 차원에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정: 저도 그 점을 주의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국제적인 부분은 한 삼분의 일이나, 사분의 일 정도만 언급하고 기본적으로는 국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죠. 국내의 인권문제를 국내의 법적 관점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차원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보호의 실패인 것이죠. 국내의 인권문제를 다룰 때에는 당연히 국내의 관점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국제적인 시각을 항상 같이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봐요.

기자: 마지막으로 현재 인권법 강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인 사회 이슈들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국내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매시간 1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는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여러 매스컴에 인권문제와 관련해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전문가로 보기 힘들어요. 강의는 사회 운동과는 달라서 5분, 10분 흥분한 상태에서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 균형 잡힌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이것이 강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박석운 노동인권연구소 소장, 강병득 국가인권위원회 국장, 차병

직 변호사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수업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의 주제 역시 이주노동자의 인권, NGO 활동의 문제, 의문사, 국제형사재판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서 현실감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인권관련 활동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할 예정...

참, 이 강좌는 다른 과목보다 숙제가 좀 많습니다. 레포트는 한 3개 정도 부과했는데, 레포트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한번 본인이 활동을 해보고 그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친구가 장애인인데 수업들으러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 자신이 직접 활동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학장한테 가서 부탁할 수 있고, 그게 잘 안되면 총장한테 탄원서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직접 해보고 그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겁니다.

현직 판, 검사들조차 대부분 인권법 교육을 따로 받지 못했고, 법원이 지난 10년간 국제인권조약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례는 1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권법 강좌개설은 서울대 법대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고시생으로 가득차 있는 법대에서 이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박준엽 기자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만나다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수호의 최전방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듯 중차대한 직무 수행을 현재 서울법대 출신의 한 인물이 맡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우리 법과대학의 75학번이자 여성으로서 최초의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강금실 장관을 만나 근황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조국 교수(형사법 담당)와 학생 김영진(박사과정), 이지연(00학번), 문진구(01학번), 박준엽(02학번)군이 참석하였고 법무부의 이춘성 공보관이 배석하였다.



79년 2월 서울대 교정에서 졸업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강금실 장관

조국 교수(이하 조): 오늘 저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발간하는 정의의 종 창간호에 게재될 동문 인터뷰의 일환으로 장관님을 방문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학교의 동문 후배들로 선배 동문의 이력과 근황을 각계에 소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선뜻 시간을 내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리며, 후배들에게 편하게 자신이 걸어온 길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이하 김): 장관님은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이십니다. 금녀(禁女)라고도 불릴 정도로 남성적 분위기가 강한 법무부에서 최초의 수장을 맡으셨고 따라서 장관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세인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보수적인 우리 사회의 성 역할에 대한 선입견도 작동하고 있는 듯 합니다.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으로서 얼마나 현저한 성과를 산출할 것인지가 여성계 전체의 위상과도 관련있다는 일부의 이야기들은 일개인에게 전체 공동체를 혼란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금실 장관(이하 강):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의 일 역시 매우 중요함을 느낍니다. 대단한 식견과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인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때로는 역부족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하는 사람이 일 외에 다른 곳에 신경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밖에서 어떤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 흐트러질 수 있

고, 때론 매우 정치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보수적인 대한민국에서 정부 핵심부처의 장관으로 여성이 임명되는 시대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고, 저는 단지 그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죠.

조: 시대적 변화는 결국은 개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금실이라는 개인의 역할이 주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강 장관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계에서 이른바 '강금실 경호본부'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질적으로는 안정적이면서도,
계속 진취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균형을
잡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대가 커서 부담감도 많으시겠습니다.

강: 법무부와 관련된 모든 일이 부담이죠. 부담을 느낄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감을 잊고 일하는 수준이에요. 사실 법무부 장관 취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부담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장관이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일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법무부 성격 자체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진보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도 동시에 요구되죠.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권위화되고 시대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니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안정적이

면서도, 계속 진취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균형을 잡는 것
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엽(이하 박): 장관님이 대학을 다니던 때가 한국 사회의 굴곡이 심했던 시기 중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학생으로서 그 당시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강: 그 때 우리가 많이 봤던 책 중에 프레리(Paulo Freire)의 『교육과 의식화』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의식화'였어요. 대학에 와서 사회에 대해 조금씩 눈 떠가는 과정을 '의식화'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의식화'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탈춤반 활동을 했는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탈춤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춤추는 게 좋아서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탈춤반에 들어가자마자 데모가 크게 나서, 동아리 선배들이 다 잡혀 들어갔고, 그 때 고척동 구치소에 접견도 많이 다녔었어요. 그 때만 해도 특별한 사회 문제의식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계속 겪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름대로의 사회의식이 생겼고, 3, 4학년 쯤에는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접하면서 스스로 사회에 대해 눈뜬 것 같아요.

조: 그 때 추었던 탈춤 가락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강: 그럼요, 아직 기억해요. 대학교 2학년 학교 축제 때 남아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강령(康翎)탈춤' 공연을 했는데, 전 그 땐 '소무' (小巫)로 출연했었죠. 탈춤반은 중앙 동아리였는데, 미학과의 김지하 선생님 같은 쟁쟁한 문화계 운동권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어요. 소위 '민중문화'라고 해서 우리 민중의 전통적 문화 체험을 매개로 '못 가진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이 탈춤반이었고, 대부분의 선배들이 학생운동을 했던, 상당히 '의식화'된 집단이었죠. 탈춤을 추러 온 건지, 운동을 하러 온 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였으니까요. 전 그걸 모르고 들어가긴 했지만 말이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름대로의 사회의식이 생겼고, 3, 4학년 쯤에는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접하면서 스스로 사회에 대해 눈뜬 것 같아요.

김: 처음엔 춤이 좋아서 동아리에 들어가신거... 맞죠?

강: 그렇죠. 춤이 마냥 좋아서...(일동 웃음)

이지연(이하 이): 재학 당시 학교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대에 여학생 수는 몇 명이었는지, 여학생들끼리 여학생회 등의 여학생 모임이나 지원네트워크가 있었는지, 교수님들과의 여학생들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법과대학의 강의내용과 방식은 어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강: 제가 학교를 다녔던 70년대 중반에는 법대에 운동권 여학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여학생 수가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학생들과의 관계는 요즘같이 스스럼없이 반말하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 친하기는 하지만 존댓말을 하는 사이였어요. 여학생들끼리는 위낙 수가 적으니깐 오히려 더 잘 모였던 것 같아요. 선, 후배끼리 자주 모임을 가졌고, 졸업 후에도 만났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에 모교에서 최초로 여성교수가 채용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물론 교수님들이 모두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법률가의 역할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 말씀이 나온 김에 관련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현재 강 장관님은 장관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대 여학생의 중요한 역할 모델 중 한 사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대 여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강: 글쎄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법의 본질과 연결시켜 대답해야 할 것 같네요. 법 제도 자체가 한 사회의 뼈대잖아요. 뼈가 휘거나 부러지면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판사뿐만 아니라 법을 다루는 모든 사람은 매우 엄격한 도덕성과 공익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법률가는 양면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현재 사회 시스템이 추구하는 법률적 가치들을 고수하면서도, 단순히 그 시스템 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도 함께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이 보수만 강조하다보면 많은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앞에서 법률가는 균형잡힌 양면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고민해야 해요.

특별히 여학생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대해 눈을 뜨기는 하지만, 의외로 직업을 가진 상류층의 여성들이 '탈 여성화'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차별적으로 약자화되어 있는 여성 일반에 대한 고려없이 능력 있는 여성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중립성의 명분 아래 오히려 여성 일반에 반하는 판단을 하는 반 여성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자신이 여성으로서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전체 여성들에 대한 책임감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남자였다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자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여성으로서 장관이 되고,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여성의 부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들과 연대감과 유대의식을 갖고. 여성은 포함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이죠.



조: 강 장관님이 지적하신 여성 엘리트의 '남성화' 또는 '중성화' 현상은 법대 여학생들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론 대학 사회 일반의 현상이긴 하지만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도 거의 모두 고시를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 시작 시기도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장관님 학교 다닐 때는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구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흐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강: 당시 학교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고시 준비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법대라는 공간에 아카데믹한 분위기가 별로 없었고, 강의도 마치 학원강의 같은 느낌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고시공부를 빨리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교양을 익힐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빨리 현실적인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자신이 여성으로서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전체 여성들에 대한 책임감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정수준의 식견과 교양을 갖게 해주는 사회라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준비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조: 사실 법대 학생들이 기초교양이나 다른 분야의 학문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고시 준비에만 빠져 있는 상황은 현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법시험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 사법시험 제도뿐만 아니라, 법관·검사 임용제도와 법학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이 문제들은 법무부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할 것 중 하나이지만. 현재 정부는 지금 당장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 제 생각에 이 문제는 크게 두 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법학교육제도, 법관·검사 임용제도를 바꾸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법시험제도를 수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무부가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화' 시대에 영어에 능통한 법률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법대 학생들의 영어실력은 대학 입학시의 수준에서 급속히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법시험에서 요구하는 영어성적을 올리면

학생들은 영어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법무부가 갖고 있는 권한인 사법시험 자체를 바꾸면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 공부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현재 드러난 문제점 중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강: 네, 좋은 생각이네요. 실제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 이기도 하고요.

문진구(이하 문): 전공과목 중에 유달리 흥미를 끄는 과목이 있으셨는지요? 있다면 왜 그랬었는지도 말해주세요.

강: 대학교 1학년 때에는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종교학과, 미학과 쪽을 가 볼까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강의를 들어봐도 역시 어떤 결핍감 같은게 느껴져서 전과를 하지는 못했어요. 법학 과목 중에는 법철학하고 형사소송법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형사소송법은 강구진 교수님이 강의하셨는데, 정말로 강의를 잘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문: 법학 공부 외에 대학 생활에서 관심을 가졌던 학문 분야라던가, 서적이라던가 하는 것이 있으셨을 텐데요.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하여 후배들이 전공공부 외에도 대학 기간 내에 꼭 했으면 하는 공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강: 너무 많은데... 아까 조국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어는 꼭 해야 하고요. 역시 인문, 사회과학 기초서적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법률가로 활동하더라도 사건의 기본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세요?

강: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작가의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이런 점에서 『역사 앞에서』라는 책이 얼핏 생각나네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김성칠씨가 자신의 심리체험을 글로 옮긴 것인데, 작가 스스로는 우익이면서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좌, 우익을 논했던 것이 참 좋더군요.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그 분야의 권위자이신 박명림 교수의 책도 추천하고 싶어요. 올 6월에 우리 공안부 검사들도 박 교수를 모시고 강연을 들을 예정이거든요.

조: 박명림 교수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논의를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초해 전개해 나간다는 점이죠.

강: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법률가의 기본자세가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박: 근래 법과대학에 와보셨나요? 장관님이 학교에 입학한 때가 관악캠퍼스로 학교가 이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일 텐데요, 그 당시에는 캠퍼스가 굉장히 황량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한 모습을 보니 어떠세요?



강: 지난 달에 안경환 학장님이 한번 초대하셔서 잠깐 인사하러 갔었고, 그때 법대 주변을 대충 볼 기회가 있었죠. 제가 관악캠퍼스를 다닌 첫 학번이었는데, 확실히 많이 변했더군요. 그런데 쭉 보니까 아쉽게도 학교의 기운이 학교 같지가 않고, 공사판 같았어요.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순수하면서도 운치있는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뭔가 분산된 듯한, 경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박: 판사, 변호사, 지금은 장관까지 법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을 두루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장관님이 생각하고 계신 법조인이 가져야 할 자세, 넓게는 법을 배운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판사, 변호사, 법무부까지 다 해보게 되었네요.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 외에 덧붙일 게 있다면 같이 법조계에서 일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끼리 의외로 상호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판, 검사들은 그 조직 자체가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자기조직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갖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의 검사들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다들 애국심도 대단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자꾸 비난을 받는지 답답해하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대부분의 검사들은 남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해서 검사들도 사회적 평가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이고 계시죠.

O: 여성 관련 이슈들 -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호주제 등 -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강: 호주제 문제는 여성부 주관 기획단과 함께 폐지법안 만드는 일을 진행 중이고요. 호주제 문제 뿐만 아니라 가

족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법무부 내에도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정책담당관이 있는데, 면회 오는 여성들을 위해 서울 구치소에 유아 놀이방을 만드는 등 구체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법무부가 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법무부 업무와 관련된 여성 차별 문제가 있겠죠. 조 교수님이 이와 관련된 책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사건이나 소송절차에 있어서 여성 차별적인 법규와 관행이 많이 있어요.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담당할 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 교수님이 직접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 법규와 관행 양쪽 모두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꺼이 돋겠습니다.

김: 마지막으로, 강 장관님 임기 중에 꼭 성취하고 싶은 3 가지 일에 대해서 부담없이 말씀해 주세요.

강: 꼭 성취하고 싶은 첫째는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정당성과 실정법 사이에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으면 실정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는게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은 우리 검찰에게도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공안부 같은 경우는 법이 아직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둘째로는 역시 검찰이 준(準)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권력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기능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법령정비 작업을 비롯해 법무부가 맡은 여러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조: 저는 강 장관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여성 검사의 수가 늘어나도록 만드셨으면 합니다. 외국의 검찰과 법무부의 경우 그 구성원의 상당수가 여성입니다. '폭탄주'로 대변되는 남성적 검찰문화를 보다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 검사의 수적 증가가 필

5년 정도 후에는 검찰 조직의 20~30% 정도를 여성 검사님들이 차지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경직된 검찰문화가 많이 유연해질 수 있겠죠.

요하고 봅니다. 현재 검찰을 지배하는 남성적 '명령' 문화가 여성적 '대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 네, 저도 그 점에 동의하고, 실제로 여성 검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검사들도 남자 검사를 못지 않게 아주 열정적이세요. 자기 소개서에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마 5년 정도 후에는 검찰 조직의 20~30% 정도를 여성 검사님들이 차지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조 교수님 말대로 다소 경직된 검찰문화가 많이 유연해질 수 있겠죠.

한 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는 시종일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 장관의 학부시절 이야기부터 사법시험개혁 문제, 여성문제 등 법무부가 맡고 있는 현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엄격하고 냉철한 법무장관의 모습 뿐만 아니라 부담없고 친근한 선배의 모습도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하는 동안 질문자들의 이야기 하나 하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강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취임 후 지난 3개월 동안, 강금실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은 우리 법조계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강 장관 스스로 말했듯이 남은 임기동안 '안정 속에서의 진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관 본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겠지만, 인터뷰 내내 보여주었던 친切함과 자신감만 유지한다면 분명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

정리: 김영진 기자/박준업 기자



故 유기천 교수 추모식 및 출판 기념회

유기천 교수는 원칙을 중시하고 소신이 뚜렷하여 학장, 총장 재임 시절 많은 일화를 남긴 바 있으며,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정부의 압력을 받던 중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학문적으로 한국 형법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유기천 교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교육 및 연구에 힘썼다.

법 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월송(月松) 유기천(劉基天) 교수 기념 강좌 및 추모 문집 출판 기념회'가 4월 11일 본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유기천 교수는 46년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수로 우리 대학에 부임한 이래, 61년부터 65년까지 법대 학장을, 65년부터 66년까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날 행사는 98년 6월 27일 별세 한 유 교수의 5주기를 두 달여 앞두고 유기천 교수의 유고를 모은 "자유사회의 법과 정의"와 추모 문집 "영원한 스승 유기천"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유기천 교수는 원칙을 중시하고 소신이 뚜렷하여 학장, 총장 재임 시절 많은 일화를 남긴 바 있으며,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정부의 압력을 받던 중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학문적으로 한국 형법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유기천 교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교육 및 연구에 힘썼다.

추모 문집은 유기천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심으로 쓰여져, 유 교수의 인간적인 풍모와 함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증언해주고 있다. 한편, 유 교수가 spiritual union이라고 언급하였던 부인 Helen Silving 여사의 글이 번역되어 실리기도 했다.

기념 행사에는 유 교수의 동생인 유기옥 여사, 안경환 학장, 이대순 법대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추모 문집 발간에 참가했던 황적인, 김철수, 이태로 본교 명예 교수, 김찬진, 김춘봉 변호사, 김문환 국민대 총장, 음선필 순천향대 교수, 권병일 (주)지학사 사장 등 유기천 교수를 추모하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1부 월송 유기천 교수의 추모 문집 출판 기념회와 2부 월송 유기천 교수 추모 강좌로 나뉘어 열렸다. 유기천 교수 기념사업회 노옹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본교 최종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황적인 명예 교수의 경과 보고에 이어 안경환 본교 학장은

축사를 통해 유기천 교수의 생전 활동상 및 그와의 교류를 언급하면서 시대를 앞서나갔던 선구자인 유 교수에 대한 학자로서의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대순 법대 동창회장 역시 “유 교수에 대한 추모와 그의 사상을 되돌아보는 것이 법학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추모 사업의 의의를 기렸다. 축사에 뒤이어 동창회장 및 학장이 편찬 작업에 참여한 집필자에게 기념 품을 증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기천 교수의 동생 유기옥 여사는 “오빠의 기념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의 뜻을 표하였다. 유 여사는 감사 인사 도중 유 교수의 생전 활동상을 회상하며 간혹 목이 메이기도 했다.

이로써 1부 추모 문집 기념 행사는 끝을 맺고, 10분 정도의 다과 시간을 가진 뒤, 2부 행사는 제 1회 월송 유기천 강좌가 열렸다. 월송 기념사업회의 노용희 회장은 ‘영원한 스승, 유기천’이라는 주제로 유기천 교수와의 과거의 친분을 회고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스승으로 유기천 교수를 꼽으며, 유 교수의 당시 모습과 성격, 일화 등을 생생하게 들려 주었다.

‘유기천의 형법학’에 대해 강연을 한 손해목 동국대 명예 교수는 유 교수의 선구자적인 저술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유기천 교수의 ‘상징주의 형법론’에 대해 강조하면서, 형법이 가지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상징주의 형법론’의 의의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입체 심리학’을 행위론에 도입했던 유 교수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했다. 강연이 끝나고 김찬진 변호사와 김철숙 명여대 교수, 김재웅 서강대 교수는 유 교수의 선구자적



인 형법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특히 김철 교수는 유 교수의 통합 학문적 사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는 형법론 뿐만이 아니라 법학 전체의 방법론으로서 필요함을 역설했다.

월송 기념 강의를 끝으로 3시간 여의 추모 문집 발간 기념 행사는 자리를 옮겨 동원생활관에서 안경환 학장이 주최하는 만찬으로 끝을 맺었다.

앞으로도 유기천 교수를 추모하는 강연과 그의 형법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법대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유 교수를 기리면서 그의 형법론의 현대적 해석을 이끌어내는 일은 본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법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많은 동문, 후배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한대웅 기자



현재 서울대 대학원장 보직을 맡고 계신 법과대학 백충현 교수님으로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특히 법과대학원과 관련하여 법학교육제도의 개선방향 및 대학원의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갖고 계신 의견을 들었다. 아래는 백충현 교수님을 방문하여 말씀을 듣고 이를 요약하여 정리한 글이다.



1. 법학교육제도의 개선방향

법과대학원의 사회적 책무 법과대학원은 다른 전공의 대학원과는 달리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일할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의 직역에서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이외에도 기업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할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일반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기관 및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행정의 연속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 일반교육, 법학전문대학원, 학술 연구대학원의 세 부분 법학교육에 있어

법학교육의 개선방안 – 백충현 서울대 대학원장에게 듣는다

서 타전공자를 위한 서비스도 간과할 수 없지만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은 법과대학원을 Professional School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의 전체적인 편제는 4년제 학사 일반법학교육,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문교육기관, 법학이라는 학문의 기반을 제공하는 학술연구기관이라는 세 파트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제도와의 연계

전문대학원의 정확한 의미는 동일직역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제도 전반과 연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는 의대와 마찬가지로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 법학교육을 전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연수원은 연수생들이 법학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이들을 훈련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 법 분

야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변호사 협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와 학문연구기관이 이와 같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가운데 법학교육의 기능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학원의 정상화 방향

서울대 내에 과연 대학원은 존재하는가?

제가 서울대 대학원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문제가 “도대체 서울대 내에 대학원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대학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에는 그러한 설치법과 시행령이 없습니다(참고로 미국에서는 Law School 설립기준을 Law School Association과 Bar Association에서 제정합니다). 어느 직역에서 근무할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 하에 어떠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커리큘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교수의 수, 도서의 구비, 재정

적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 대학원에는 이러한 체계적인 목표와 계획이 부재합니다. 결국 이는 서울대 대학원의 총체적인 부실화로 이어집니다. 대학원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교수진이 충분합니까? 서울대 대학원의 현실이 이러하니 우리 사회에서 대학원 학위 소지자의 자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외국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위를 받아서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자질을 인정하여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시·유학에 이르는 간이역에

불과한 서울대 대학원

법과대학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석사의 경우 대부분이 사법시험 혹은 유학준비의 기간을 벌기 위하여 석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문제가 추가됩니다. 석사를 다니는 중에 고시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사시에 불으면 대학원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후 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는 김에 과정을 마치자 하는 심정으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평소에 지도교수와 상의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논문을 썼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외국유학 혹은 경력관리의 목적으로 박사과정에 들어옵니다.

국가는 대학원 박사과정

인적 재원에 투자해야

이력을 쌓기 위하여 다니는 박사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학문할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은 전적으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록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은 Full-time Student(부업을 갖지 않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로 있게 하면서 그들의 전문직역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뜻을 둔 학문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원 혹은 봉사장학생으로서 연구하게 해야 합니다. 박사부터는 개인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다니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투자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폐교론,

근본 원인 간과한 정치성 발언

서울대학 폐교론은 대한민국의 최일류대학을 제거하자는 논의인데 정치적으로 호소하려는 일부의 발언이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정치가들이 사반세기 동안 잘못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입시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고 한 점입니다.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 입시가 바뀐다고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닌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교육부는 원칙 중심의 교육행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금을 조성하여 학문지원사업, 장학사업에 힘써야 하는데 정치논리를 내세워 BK라는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율적

으로 학문의 주제영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성과물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담보되지 않아서 꾸준한 학문연구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교육자이니 정치가와 교육공무원들이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가르쳐서 시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사회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만큼 원칙을 중시하는 학술연구풍토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대학원 중심 대학'은 없다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말은 옳지 못합니다. 학부과정을 충실히 운영하여 사회에서 활동할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서울대학교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의과대학 등 전문대학과 미국의 Law School이 대학원 중심의 대학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포기와 무기력, 대학원 개혁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대상

현재 서울대 대학원은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계속 아이디어를 내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계획이 다소 벽차기 때문에 1년 정도 실현이 늦추어 질 수는 있지만 달성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시도도 하지 않고 대학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포기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민정 기자



서울법대 장애의 벽 걷어낸다. - 손위용, 김용광 군의 입학

“겨우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제 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손위용(孫偉勇·50·울산 남구 신정2동), 김용광(金龍光·41·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씨는 나이와 장애의 벽을 딛고 2003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법대에 합격하였다.

손위용씨는 부산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0년 빗물에 젖은 기차 난간에서 미끄러져 두 다리를 잃은 1급 지체장애인이고 김씨는 생활고로 동국대 법대를 그만둔 뒤 84년 초망막색소변성과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 돋보기 없이는 앞을 볼 수 없는 3급 시각장애인이다. 주변의 싸

“기억력이 나빠져 사법시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하고 싶다”

늘한 시선과 싸워야 하는 장애인에게 배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나이와 몸짓이었다.

사고로 다리를 잃은 뒤 시련은 있었지만 법학도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손위용씨는 어릴 때부터 “수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법대 진학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부산고 2학년인 1970년 7월 열차사고로 두 다

리를 잃으면서 그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울산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이용, 학교를 다녔던 손씨는 움직이는 기차의 난간을 잡고 올라 타려다 빗물에 미끄러져 기차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난간의 손잡이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이다.

1년간 휴학 끝에 자퇴서를 낸 손씨는 71년 고졸검정고 시에 합격한 뒤 생계를 위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손씨의 성실한 과외수업은 금방 소문이 나 한때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유명한 과외 강사가 됐었다. 그러나 과로한 탓에 건강이 나빠져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병원비로 다 써버리게 되었다.

75년 결혼한 아내와 세딸의 지극한 간호로 건강을 회복한 손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작은 금은방을 열었지만 93년 부도가 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등 다시 한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손씨는 장애인용 오토바이에 넣을 연료를 살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과외를 시작, 돈을 모았다. 세 딸을 모두 대학에 보내며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손씨는 딸들로부터 “더 늦기 전에 대학입학의 꿈을 이루라”는 적극적인 권유를 받았다.

결국 그는 2001년부터 수능준비에 들어갔고, 과외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한 실력으로 지난해 수능에서 331점을 받아 중증장애인으로 처음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대

학진학에 대비,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리기 위해 최근 낡은 의족을 바꿨다는 손씨는 “기억력이 나빠져 사법시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돋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한편 두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해 온 김용광씨는 서울 성남고를 졸업하던 1981년 동국대 법학과에 합격했으나, 학비는 물론 생활비 마련조차 힘들어 대학생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뒤 김씨는 공장생활과 술집 웨이터 보조 등으로 힘겹게 살아오다 1984년 초 망막색소변성과 백내장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해 겨울 수술을 받아 일부 시력을 찾긴 했지만 시각장애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직업교육 등을 위해 1985년 청주 맹학교에 입학했다. 청주 맹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뒤 출장안마, 신문배달, 다단계판매회사 영업사원 등을 전전하다가 법관의 꿈을 접을 수 없어 4년 전부터 신촌 고시원에서 청소 등 잡일을 하며 하루 7~8시간을 책과 씨름했다. 그 뒤 김용광씨는 법대에 재도전, 2002학년도에 연세대 법학과에 합격했으나, 또 다시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이란 벽에 부딪혀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2003년 비로소 등록금이 적고 장애인 장학금 혜택이 많은 서울대 법대에 응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자신의 꿈을 이뤘다. 김씨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장애인들과 소외받고 사는 사람들을 돋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특수 관독기를 살펴보고 있는 법대 학장단과 김용광씨

1995년 시작된 장애인 특별전형이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손위용, 김용광씨의 법대 생활은 험난하기만 하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손씨가 겪은 첫 번째 어려움은 난간을 활용해 계단을 오를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넓고 경사가 심한 캠퍼스는 손씨의 수동휠체어에 적당하지 않다. 지난 해 연세대 법대에 합격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다시 서울대를 지원하여 합격한 김용광씨는 “국립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시각장애인용 노트북과 확대경이 부착된 독서대(CCPD)가 갖춰진 사립대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법대 측은 올 여름방학 건물 내 엘리베이터 공사에 착수하고 맹인용 도서관시설 마련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손씨와 김씨는 “서울대의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재학 중인 47명 장애학우와 8명의 장애신입생의 문제”라며 “법대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도 장애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씨의 부산고 선배이기도 한 안경환 법대 학장은 모금활동을 통해 전동휠체어를 선물하기로 하고 고교 2년 때 밀양에서 부산으로 함께 통학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 신입생을 격려했다. 안학장은 “의사가 꿈이었지만 다리가 불편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좌절했던 친구를 위해 한때 소송도 불사할 생

“서울대의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재학 중인 47명 장애학우와 8명의 장애신입생의 문제 : 모든 서울대인들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소중한 체험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어...”

각이었다”며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법학도로서의 자세”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제 겨우 방향을 전환했을 뿐 잘 길이 멀다”며 “평생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애써왔지만 이제 남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김의택 기자

장애인 중 한달에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70.5%!
장애인 50%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장애인 1.6%만이 대학 진학!
장애인 70%가 실업자!
장애인 현실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통계들이다.

2002년 9월 서울대학교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며 단식농성을 했을 때 나는 단과대학(법대)의 동아리 차원에서 지지방문을 다녀오고 학내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후 장애인권연대사업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학내 장애인 관련 단위 5개가 모였고, 학내 장애학우 교육권 문제와 전반적인 장애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알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서울법대 장애인 연대는 장애인권다큐상영회, 대본부 질의서 제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세터만들기, 학내 장애학우 실태조사,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1인시위, 서명운동, 메이데이 장애차별철폐 포럼, 총장과의 대화 그리고 서울시청 점거농성 지지방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단지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정의로운 인간', '합리적인 인간', '똑똑한 지식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이 걸린 문제를 저울질하고 도구화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는가.

문·집회 등의 장애인권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왔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현실이 나아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고민했다.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권의 문제가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현실과 장애인권의 중간점을 찾으려고 애쓴다.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예비법관들인 법대생

장애인인권 연대사업에 참여하면서

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일까 하고, 하지만 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권리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판결내리고자 하는" 태도는 그 문제를 자기문제로 느낄 수 없게 함과 동시에 마음깊이 이해할 수 없고 일정부분 그 권리들을 현실적인 논리로 재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절진적인 해결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권리, 삶의 침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그것들이 결코 재단될 수 없는 것들임에도.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단지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정의로운 인간', '합리적인 인간', '똑똑한 지식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이 걸린 문제를 저울질하고 도구화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는가.

개인의 경쟁력이 최상의 가치인 이 시대, 효율성과 경제 논리가 인간의 삶과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이 시대, 점점 더 몸을 상품화하고 몸의 정상성 신화를 공고히 해가는 이 시대에 장애인들을 억압하는 현실의 조건들은 나를 옥죄는 조건들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활동은 그러한 조건들을 바꿔가고 동시에 나 자신을 바꿔가는 과정이다. □

차성안(법대 석사과정)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교수-학생 간담회

논의의 쟁점과 의견수렴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이 있는 발언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 발언을 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성관련 발언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일차적으로 사고하며, 관행적 발언이라도 일단 자기검열장치를 한번 가동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생 간담회의 의의

지난 2002년 10월 4일에 법과대학은 의미있는 시도를 하였다. 법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의 성희롱, 성차별 기타 성관련 발언의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이 간담회는 한국 사회의 남성우월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그 동안 금기시 되어오던 민감한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또, 이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한 방법으로 행해져서 법과대학 내부의 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에 그 의미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간담회는 우선 학생들이 그동안 접한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을 보고하고, 이어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보고에 따르면 의도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심각한 문제성이 있는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 일상적 발언과 농담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거한 사례들이 여럿 지적되었다. 이는 현재 한국법조계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생성된 고정관념이 많다는 점과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일상적인 발언과 농담에 사용할 경우 양성평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된 것이다.

성관련 발언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일차적으로 사고하며, 관행적 발언이라도 일단 자기검열장치를 한번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법과대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성희롱, 성차별 발언의 의도와 맥락에 대한 서로의 이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서로의 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
- 앞으로 성관련 발언 뿐 아니라 인동에 있어 문제를 느낀다면, 직접 이야기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방법(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학생회를 통하는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공식적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의 길을 열다.

양성평등 수업환경 만들기에 법대학우 여러분의 참여를!!

강의실에서 한번쯤 겪어 보았을 불편한 이야기들....
여학생이 많아져서 한자 실력이 떨어지고.
법대 수준이 떨어지고, 사시 합격률이 저조하고,
나라가 영망이고....
온통 남자들 세상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들...
너무 화나죠?
법대 학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들,
교수님께 들었던 불편한 이야기들...
모두 모아 보자구요.
사례를 알려주시고 싶으신 분은 [강의실]->
[기타법학관련]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법대 학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법대를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22대 법대 학생회 대자보 중에서 발췌—

쉽게 해결하기 힘든 사안에 대하여 대화로써 해결의 길을
연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 보인다.

22대 법대 학생회의 양성평등 수업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문제제기는 그것이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22대 학생회의 위와 같은 자보를 보고 관심을 가진 법대 정공식 학생 부학장의 제안으로 학생과 교수간의 대화가 성사되었다.

학생들은 수업내외에서 느낀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 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것들이, 여학생들에게 불쾌감

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지를 꺾어 놓게 되어 양성이 평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학문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들이 교수님들과 이야기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며, 이러한 간담회를 앞으로 정례화하여 직접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양성평등 수업만들기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새터에서 학생회에서 준비했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법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건의도 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정의하는 용어가 객관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연히 다른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성폭력이라는 용어로 묶어버리면서 비약과 혼동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또한 성폭력을 판별함에 있어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지나치게 주관적 기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셨다. 적어도 이러한 방식의 대화가 유익하며, 앞으로도 직접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논의가 이루어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데 공감하셨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공식적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동의가 이루어졌다.

법과대학의 교수-학생간의 이번 간담회는 그 첫 번째 걸음으로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합리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법대 교수들의 겸허한 자세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만들어 낸 것으로, 쉽게 해결하기 힘든 사안에 대하여 대화로써 해결의 길을 연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 보인다.

이번 간담회의 경험은 법과대학에 있어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교수와 학생간의 긴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

김의택 기자

「자랑스런 서울法大人」 시상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는 지난 5월 27일 서울프라자 호텔 덕수홀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제 11회 자랑스런 서울법대인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자랑스러운 서울法大人으로 선정된 법대 동문은 洪震(법관양성소 3회/作故) 독립운동가, 陳懿鍾(城大 16회/作故) 前국무총리, 蘇信永(법대 8회) 前국무총리, 裴命仁(법대 10회) 前법무부 장관, 李洪九(법대 11회) 前국무총리, 李漢東(법대 12회) 前국무총리, 李壽成(법대 14회) 前국무총리 등 모두 7명의 동문이다.

이중 특히 작고하신 홍진 선생을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으로 현장(顯彰)하게 된 내력을 살펴보면 법조인으로 활

동하다 일제에 우리의 주권을 침탈당하자 바로 관직을 떠나 독립운동가로서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는 “행동하는 지성이란 과연 어떤 경우를 뜻하는지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날 시상식과 함께 올해로 고희(古稀, 법대 11회) 및 회갑(回甲, 법대 20회)회기를 맞이한 동문에게 축수페 증정 및 헌수연(獻壽筵)이 개최되었으며 이어 지난 2월 26일 모교를 졸업한 신입회원(법대 57회)을 환영하는 자리도 함께 열리는 등 이 날의 행사는 선·후배동문 모두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친선교례의 장이 되었다. □

김영진 기자

자랑스런 서울法大人 選定記

洪震 (法官養成所 3回)

晚悟 洪震 선생께서는 19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관양성소를 졸업하시고 한성평리원 및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검사를 지내시다. 1910년 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자 단호히 관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서 독립운동가를 위해 법정투쟁에 나서는 등 한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시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후 상해로 망명하시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법무·내무·외무총장 등 요직을 역임하시고 국무령(대통령)까지 지내신 선생은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당군(黨軍)으로 한국독립군을

창설, 만주에서 독립무장투쟁에 앞장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중경 임시정부 당시 좌우합작의 연립내각을 구성, 좌우익의 이념을 초월하여 독립운동의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민족지도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광복후 1946년에 비상국민회의 의장으로 건국사업에도 진력하였습니다.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자주독립을 위하여 바치신 선생의 강인한 의지와 신념은 우리 서울법대인의 훌륭한 귀감이기에 ‘자랑스러운 서울法大人’으로 선정하여 그 뜻을 기리는 바입니다. □

2003년 5월 27일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同憲會
會長 李大淳

엘리트, 죽일 것인가 키울 것인가

호문혁 교수



엘리트를 죽일 것인가, 키울 것인가? 평등한 세상에서 엘리트는 필요 없고 엘리트를 위한 교육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사장이 잘 못을 저질렀다고 사장 자리 를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다. 엘리트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럴수록 출중한 엘리트를 키워야 한다.

등학교 1학년 9월 어느 날이었다. 국어선생님이 숙제를 내 주셨다. 각 분단별로 외국 작가의 소설 하나씩을 지정하여 그 소설을 한 달 안에 다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두세 권짜리 대작이었다. 우리 분단에 지정된 소설은 로망 롤랑의 「장끄리스토프」였다.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했지만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서 세 권을 독파하는 것이 끔찍한 고행이었다. 하지만 다 읽고 나니 대작을 독파하는 것이 취미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1년간 「레미제라블」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대작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다. 그 경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 때 내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국어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우리 또래는 그렇게 10대를 보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만일 요즘 어느 국어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런 숙제를 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을 우리 학생들에게 던져 보았더니 대답은 다 똑같았다. 학부모들이 데모를 해서 그 선생님을 학교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었단 말인가? 그 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교육을 시킨다고 외쳐대지 않았는가 말이다. 전인교육을 모든 학생(全人)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외국어 교육도 그렇다. 몇 해 전부터 영어 광풍이 불어 심지어는 우리말도 못하는 아기에게 영어부터 가르치는 것이 유행이 되어 버렸다. 다른 외국어는 죽은 언어라고 무시해 버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외국어라고는 영어밖에 할 줄 모르게 되었다. 만일 영어가 만능이라면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독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숱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독일의 수준 높다는 김나지움에서는 제 1외국어로 영어나 라틴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밖에 제 2, 제 3, 제 4외국어까지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독일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럴까.

엘리트 무용론이나 엘리트 죽이기보다 제 역할하는 엘리트 육성에 힘써야 이러한 논의가 엘리트 교육에나 해당하지 일반 국민을 위한 대중교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면 엘리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수난시대가 되었다. 온갖 특권을 독점하여 누리면서 이 나라, 이 사회를 망쳤다고 욕을 먹고 있다. 이런 비난은 어느 범위에서는 타당하다. 일반 대중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 엘리트라고 할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불신이 마침내는 엘리트 무용론 내지 엘리트 죽이기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엘리트를 죽일 것인가, 키울 것인가? 평등한 세상에서 엘리트는 필요없고 엘리트를 위한 교육도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사장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장 자리를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다. 엘리트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럴수록 훌륭한 엘리트를 키워야 한다. 불경에 이런 우화가 있다: 뱀 한 마리가 있었다. 여느 뱀들과 마찬가지로 이 뱀도 움직일 때 항상 머리가 앞서 가고 꼬리는 그 뒤를 따랐다. 꼬리는 늘 그것이 불만이었다.

참다못한 꼬리가 머리에게 대들었다. 말싸움에 진 머리가 양보하여 그 때부터는 꼬리가 앞서 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뱀은 불구덩이에 떨어져 타죽고 말았다. □

-서울대 대학신문 2003. 5. 3자 기고

아일랜드 대기근과 기억의 역사

한인섭 교수

하버드 대학이 있는 캠브리지시의 중심가에 있는 넓적한 공원, 캠브리지 코먼에 가면 매우 사실적인 동상이 있다. 굶주림과 절망에 가득찬 엄마가 탈진한 아이를 안은 채 손을 벌리고 있고, 그 앞에 어깨에 굶주린 소녀를 안은 채 그 모자를 향해 손을 뻗치는 남자를 새겨놓은 모습이다. 양상한 체구와 다 헤어진 넝마를 간신히 걸치고 있는 동상을 통해, 우리는 절망적인 굶주림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배우는 작은 배려가 주는 힘을 느끼게 된다.

그 장면은 그 유명한 아일랜드 대기근에서 따온 것이다. 1845년부터 1850년까지 5년간이나 지속된 기근의 참상은 An Gorta Mor, 혹은 The Great Hunger라 불리는 대재앙을 기록했다. 20세기의 비아프라, 소말리아의 참상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기근으로 850여만의 아일랜드 인 전체가 엄청난 고통과 상실을 겪어야 했고, 그 중에서 백만명 이상의 아일랜드인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갔다. 견디다 못해 혜와이민의 길로 내몰린 인구가 2백만 이상이었다. 그 중 많은 인구가 여기 보스톤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북미지역으로 피난처를 찾았다. 케네디 대통령의 선조가 미국 이민길에 올랐던 것도 이 때였다. 나라 전체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면서 죽음과 유랑의 길에 내몰렸다. 아일랜드의 전통과 문화의 파괴적 해체가 아울러 진행되었다.

아일랜드 소설가 William Carleton은 이렇게 썼다. “사람들의 얼굴은 양상하고, 눈빛은 황량하고 팽하니 열려 있고, 그들의 발걸음은 가냘프게 비틀거리네”. 들판을 다녀보면 한줌의 무리들이 어깨에 관을 매고 지나가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것이라는 말과 함께, 도로의 연변에도 많



북한의 주민이든 군인이든 전투현장이 아닌 비전투상황에서는 한 형제와 자매가 아닌가. 이들의 사무치는 굶주림과 아사의 기억이 쌓이고 쌓이면, 화해와 통일에의 길을 막는 거대한 정서적 장벽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바로 한 형제라 하면서, 한 민족이라 하면서 자신은 풍요하고 사치한 생활을 향유하면서도 다른 형제와 동포의 처절한 재앙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상대방에게 사무치는 증오감으로 자손만대로 이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온 시체가 널려 있었는데, 그들의 입술은 풀빛으로 착색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기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옆에 있던 영국인들이었다. 미국독립혁명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탐방하는 코스인 보스톤의 Freedom Trail을 따라가다 뜻밖에 바로 그 대기근 장면에 부딪쳤다. 1773년 보스톤 차사건으로 이어지는 선동의 중심지였던 Old South Meeting House 앞의 광장에서 아일랜드 대기근을 다룬 동상을 다시한번 만났던 것이다. 캠브리지 코먼에서의 그 동상보다 훨씬 전율할 표현을 담아놓았다. 절망에 찬 엄마가 쓰러진 아이를 옆에 하고 앞으로 손을 벌리는 장면은 캠브리지의 것과 별 다를 바 없었다. 달랐던 것은 바로 그 참상을 외면한 채 오만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걸어가는 영국인(잉글랜드인)들의 모습이었다. 아일랜드인의 영양실조와 허약한 체구와 선명하게 대비되어, 영국인들의 나들이하는 가족의 평온함과 건강함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영국인들은 자신이 통치했던 아일랜드인의 참상을 단순히 못본 체 했던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영국정부는 잉글랜드의 부재지주들에게 지대를 갚도록 하기 위해 그 기근 속에서도 수천톤의 곡물을 강제로 빼내갔던 것이다. 아일랜드 시인 Lady Jane Wilde는 절규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곡식을 수확하고 이방인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네”라고. 영국인에 대한 사무치는 증오심은 아일랜드인들의 가슴팍에 자손만대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왜 대기근의 참상이 캠브리지와 보스톤에 동상으로 자리잡고 있는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시민들이 이 참상의 소식을 듣고 지원과 배려의 손길을 뻗쳤던 것이다. 보스톤의 동상에 새겨진 동판에 따르면, 1847년 800톤의 식량, 구호품, 의복 등을 선적하여 15일의 항해 끝에 아일랜드의 Cork Harbor에 도착했다고 한다. 아일랜드인들은 메사추세츠 주의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그 감사는 당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1997년 7월 23일 아일랜드의 여성 대통령 Mary Robinson은 캠브리지 시를 방문하여 캠브리지 코먼에 앞에 말한 그 동상을 현정했던 것이다. 보스톤의 그 동상도 같은 해 아일랜드 협회와 유자들이 현정한 것이었다. 800톤이 얼마나 큰 지원이었는지는 잘 짐작되지 않는다. 하지만 절망 한가운데서 받은 지원은 어느 때의 수십배의 가치에 값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지원받았던 조상들은 그 감사의 기억을 후손으로 후손으로 전했던 것이고, 그것이 15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감사의 동상을 현정하는 미담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북한의 대재앙을 우리는 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몰라도 그 참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지속적인 북한주민의 굶주림과 아사, 영양실조 현상이 자연재해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자연재해조차 자연수탈을 일상화했던 사회주의 정권의 탓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를 망쳐놓은 북한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탓할 수 있고, 그 점에서 김일성/김정일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식량이 지원되면 식량배급의 통로를 장악한 북한지배층 집단의 대주민 선심공세로 악용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심지어 그 식량이 최우선적으로 배급될 북한의 군인들의 사기도 올려줄 것이고, 그로 인해 남북한의 군사적 역학관계에 약간의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이든 군인이든 전투현장이 아닌 비전투상황에서는 한 형제와 자매가 아닌가. 이들의 사무치는 굶주림과 아사의 기억이 쌓이고 쌓이면, 화해와 통일에의 길을 막는 거

대한 정서적 장벽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바로 한 형제라 하면서, 한 민족이라 하면서 자신은 풍요하고 사치한 생활을 향유하면서도 다른 형제와 동포의 처절한 재앙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상대방에게 사무치는 증오감으로 자손만대로 이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캠브리지 코먼의 동상을 세운 이들은 자신들의 교훈과 염원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이 풍요의 세상에서 다시는 한 사람도 굶주려서는 안 된다.

Never Again Should a People Starve in a World of Plenty! □



‘八姦’을 경계하십시오

조국 교수

노무현 대통령 귀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축하의 인사가 아닌 경고의 간언(諫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새 정부가 밝힌 10대 국정과제가 현 단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위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측근, 정부와 집권당의 중요 인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집권 초기의 뜻과 계획은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대통령 개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의 좌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한비자(韓非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八姦)의 문언을 빌려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상(同床), 즉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향후 각계각층의 이익집단들은 영부인·자녀·며느리·사위 등의 친인척에게 온갖 연고를 동원해 다면적·단계별 로비를 전개할 것입니다. 피와 살이 섞인 동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 이들을 통한 인사청탁이나 정책 조언은 무조건 잘라내십시오.

둘째 재방(在旁), 즉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처신하는 입 속의 혀 같은 측근을 조심하십시오.



취임 초기에 곰팡내 나는 옛 글을 빌려 쓴소리를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와 당에 포진돼 있는 집권세력 전체가 항상 자경자계(自警自戒)하고, 또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추동(推動)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켜 내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오. 명하지도 않았는데 예예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분부대로 하겠노라고 말하며, 생각하기도 전에 뜻을 받들고 용모를 엿보거나 안색을 살피서 대통령의 심증을 헤아리는 자 말입니다. 이들에게만 의존하는 대통령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부형(父兄)의 행태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애하며 아버지나 형님처럼 모시고 따랐던 대신정리(大臣廷吏)들이 권력형 부정부폐에 연루되는 것을 초반부터 예방하십시오. 집권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이 부형들의 집에는 언제든지 현금이나 무기명채권이 가득찬 골프 가방이 배달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양(養殃)하는 자, 즉 대통령의 사적인 기호(嗜好)와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자력을 동원하려는 자는 재앙을 조장할 것입니다. 예컨대 노(盧)비어천가를 부르려고 애쓰는 자, 대통령이나 영부인께서 학사학위가 없음을 건수로 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다섯째 민맹(民萌)하는 자, 즉 공직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재화를 흘낏여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 역시 사가(私家)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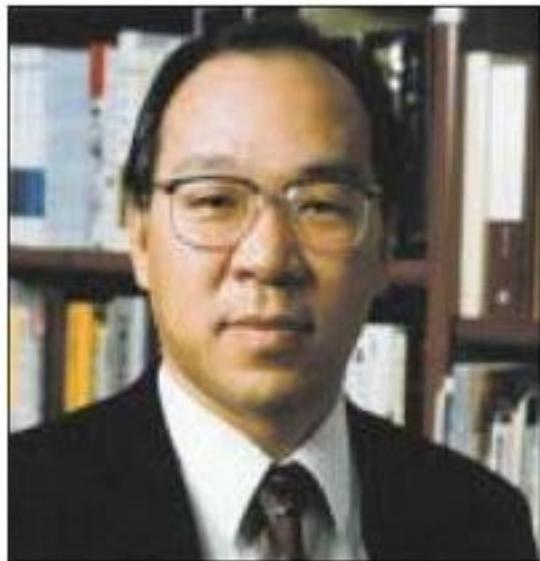
여섯째 유행(流行)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대화 통로가 막혀 있음을 이용해 국민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미명 아래 유창한 변설(辨說)을 구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일곱째 위강(威強)하려는 자, 즉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별도의 파당을 지어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는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 정부의 이름에 걸맞도록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참여를 북돋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덟째인 사방(四方)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방에 있는 주변 대국의 위세를 빌려 대통령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통령은 철저히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임 초기에 곰팡내 나는 옛 글을 빌려 쓴소리를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와 당에 포진돼 있는 집권세력 전체가 항상 자경자계(自警自戒)하고, 또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추동(推動)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켜 내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임기 말에 이러한 저의 글월이 공연한 기우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시민사회운동은 바깥에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저자인터뷰: 최종고 교수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

법과 종교(「법과 종교와 인간」/삼영사), 법과 문학(「法 속에서 詩 속에서」/교육과학사), 법과 미술(「도미에의 사법풍자화」/열화당, 「법과 미술」/시공사) 등 법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연구하고 소개해온 최종고 교수는 이번에는 '법상징학'이라는 또 하나의 생경한 분야를 책으로 펴냈다.

최종고 교수의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아카넷)」의 출판에 맞추어 저자를 만나 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묻고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

■ 문: 우선 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듣고 싶다.

■ 답: 본 저서는 본격적인 법상징학에 대한 연구서라기보다는 법미학적 관점에 가까운 접근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관심과 취미의 차원에서의 수집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법이념의 상징물로서 유스티치아와 해태상에 주목하였는데,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법사상은 서양의 논리 중심, 개념 중심의 법철학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정서적이고 미학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본 연구가 이제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동양적 법상징에 대한 시론이라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 문: 책의 전반부에서 상징의 의미와 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상징이라는 것이 이상향을 실체화, 조형화한 것이라고 본다면, 상징을 강조함으로써 상징이 지향하는 이상이 현실에서

도 구현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현실에 있어서의 모순을 은근하게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 상징은 개념을 초월한다. 동양이 풍부한 상징의 기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문화는 지나치게 문자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 검찰에서 검찰의 시끄러운 상황들이 검찰의 상징물인 일각수의 뿔이 검찰청사 쪽을 향하고 있는 탓이라는 의견을 좁아 뿔의 위치를 옮긴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상징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상징의 힘이 현실에서 발휘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문: 책에서도 주목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해태가 대표적인 정의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현재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상으로는 해태에 관한 설화나 정의의 상징물로서의 기록이 적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답: 상징이라는 것 자체가 문자화되어 보존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래도 해치관, 해치복 등 몇몇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 문: 법상징이 정의감의 표출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정의의 상징이 서양에 비해 적고, 다양화되지 못한 것은 아직 정의감이라든지 법문화 같은 것이 서양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탓은 아닌가. 또한 정의의 여신상과 같은 서구적인 상징물 외에 우리의 고유한 정의감의 표현으로서의 한국적 상징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 답: 우리에게 고유한 법의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한다. 또한 우리의 법상징물로서 해태가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현대적 해태와 같이 고유한 상징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조형화의 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학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면, 예술가들이 이를 받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양의 유스티치아상을 한국의 선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는 작품으로 표현하는 등 서구의 상징물을 우리식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 문: 본 저서에서는 법상징물이 표현하는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에 주목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정의만이 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은 아닐 것이고, 질서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법의 다른 이념에 대해서는 법상징학적 연구계획은 없는지.

■ 답: 역시 아직은 법상징학을 본격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만, 동양의 법상징은 서구적인 법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동양에서는 개념법학이라고도 불리는 서구의 법상징에 비해 합리성이나 논리성보다는 미학적인 부분, 즉, 개념과 체계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고, 본 저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였다.

■ 문: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린다.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 답: 나 역시 새로운 관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는 동서양의 법상징물에 관한 풍부한 삽화를 곁들인 어렵지 않은 서술로 법학도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법상징학을 알아 가는데 친절하고 차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

오지영 기자

문화관광부 '2002 우수학술도서' 선정 -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한국근대법사고」

1.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이 공동 집필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이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02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법률가의 사회적 비중의 증대와 더불어 더욱 중시되고 있는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 범조인 양성의 현장에 있는 서울대



학교 법과대학 교수들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집필한 데에 더욱 큰 의의를 지닌다. 저자들은 이 책의 집필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법의 사회적 비중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군사-경찰권력이 지배하던 권위주의 체제가 약화됨과 함께 법의 비중이 커져 간다. 군대와 안기부, 보안사의 동향보다 검찰과 법원, 현법재판소의 경정이 훨씬 주목받는다. 사회를 질서지우고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법의 비중이 커갈수록 법률가의 사회적 비중이 커질 것은 당연하다. 이런 때 법률가의 태도와 행동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더해 간다. 법률가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권리남용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은 법률가 개인에 대한 지탄은 물론이고 사회질서의 등뼈 역할을 해야 하는 법의 권위 자체가 무너진다. 법률가의 잘못은 자신의 존재기반인 사회전체의 존재기반이 법의 권위와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윤리와 책임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전체시민의 몫이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윤리·책임에 더하여 전문적 윤리와 책임(Professional Ethics & Responsibility)이 강하게 요청된다. 법이라는 공기(公器)를 다루는 법률가들은 시장경제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의 추구행위를 곧 공익 전체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법률가 집단마다 요청되는 구체적 윤리항목은 상이할지라도 모두가 합쳐 공동선을 이루는 방향으로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법률가의 책임문제도 그동안 매우 등한시되어 왔지만 법의 지배를 생활화하는 현 시점에서

그 책임문제는 훨씬 염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법률가는 법이라는 공적 규범을 통해 생활하는 사람이기에 법률가의 행동이 법규범을 벗어나는 경우 엄정한 법적 취급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을 공부하고 학양한다는 것은 법률가의 태도와 행동의 문제이자 사회질서와 사회관계의 문제이며 전체 사회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 2부는 식민지 조선의 법제에 대한 글 여섯 편과 번역 한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3부는 논문이 아닌 각기 다른 저서의 서평 세 편을 모은 특이한 구성 형태를 띠고 있다. 저자는 “저서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있어야 하며,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힘찬 비상을 위해 감히 용기를 내어 묶어 보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이우열 기자

특히 사법시험 풍토에 길들여 있는 한국의 법학도들에게 이 책은 걸맞는 윤리적 책임의식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실무적인 법학교육 외에 독립된 윤리 교육을 받을 기회가 드문 법학도에게 이 책은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2. 한국근대법사고

서울법대 정긍식 교수의 오랜 노력의 산물인 「한국근대법사고」가 문화관광부 ‘2002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근대적인 법학에 대한 연구가 해방 이후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제사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근대법사에 대해 정리해 놓은 최초의 책으로 앞으로의 한국법제사 연구에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는 제 1부에서 1894년 6월 갑오개혁부터 1910년 8월 한일합방까지 법제의 변화를 살린 일곱 편의 글로 엮었고,



2002년~2003년 상반기 서울대 법대 교수들의 저작활동

「헌법소송법」

-정종섭 교수

정종섭 교수의 「憲法訴訟法」은 1989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 10여년간의 이론적인 논의를 평가하고 정리하여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저술이다.

저자는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실체법인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는 작용이고, 헌법소송은 이런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을 절차법적으로 철저하게 구체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따라서 헌법소송의 논의도 헌법에 의해 지배되며, 헌법의 법리는 그대로 헌법소송법의 법리를 지배하고 창출한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수입법학'의 무모함과 위험성 그리고 '외국콤플렉스'로 인한 오류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외국의 것을 번안하는 수준을 넘어 '지금 여기'의 제도들과 규범을 들여다 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계적 이해의 중요성을 느끼고, 본 저서 「判例憲法訴訟法」을 출간하였다. 본서의 기본적 체계는 이미 출간된 「憲法訴訟法」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 두 책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헌법소송의 이론과 판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독자들은 「憲法訴訟法」이나 「憲法裁判講義」를 읽으면서 해당부분의 논의에 대응하는 판례는 용이하게 「判例憲法訴訟法」을 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憲法訴訟法」에서 직접 인용하지 못한 판례, 핵심만 인용하였던 판례, 그리고 중요한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 역시 「判例憲法訴訟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헌법연구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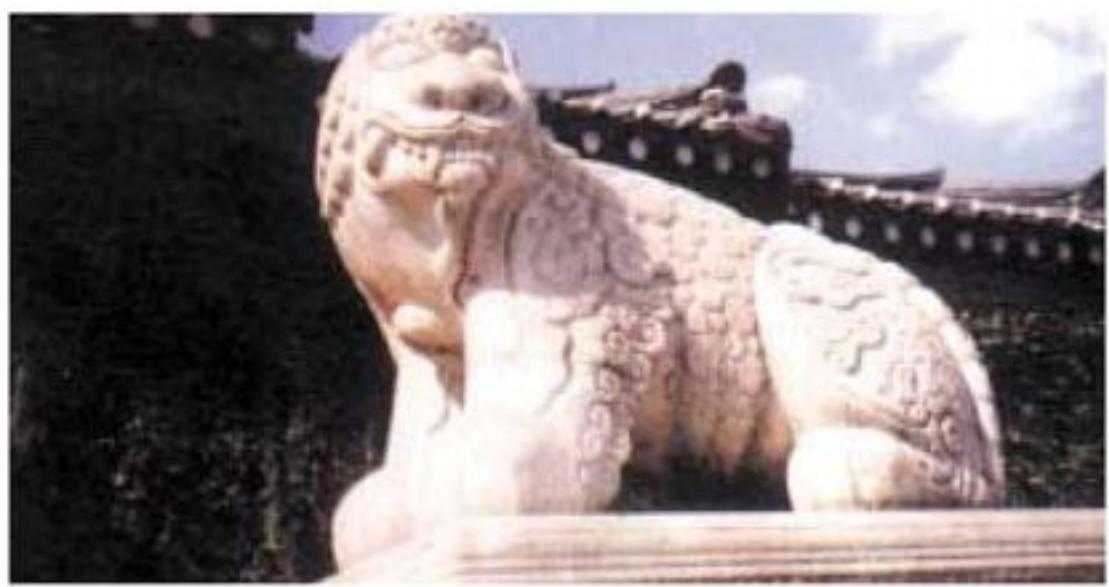
-정종섭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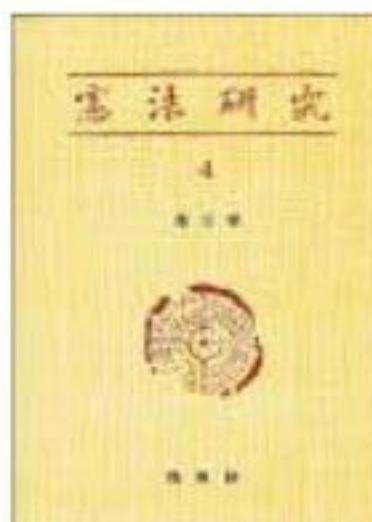
정종섭 교수의 「헌법연구4」는 한국헌법학의 정립을 위한 일련의 작업중의 하나이다. 저자는 지난 10년 동안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국가 개혁과 민주화의 실현을 갈구하였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서 혼란을 기듭하고 있고, 우리의 학문 전 영역에서의 이론적 논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판례헌법소송법」

-정종섭 교수

정종섭 교수는 헌법재판소판례의 체





따라서 저자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수 많은 과제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 동안 헌법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여러편의 글을 이 책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한국헌법사문류」

-정종섭 교수

많은 법학자들이 지난날 한국의 법사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음을 반성하고 분야별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정종섭 교수가 우리 헌법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방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짐작시킨 이 책은 앞으로 다른 여러 법 분야의 역사 및 통시적 연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신동운 교수

서울대 법대 신동운 교수가 “입문 일본형사수속법”이라는 번역서를 내놓았다. “입문 일본형사수속법”은 일본의 미즈이 마코토 교수와 사카마키 타다시 교수의 공저로서, 일반독자를 대상으로 일

본의 형사절차의 구조와 진행과정을 평이하게 전달하고자 한 입문서이다. 신동운 교수는 “입문 일본형사수속법”을 번역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일본의 형사절차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단순히 이를 번역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형사소송법과의 차이점을 [역자 코멘트]에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본 형사소송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의 비교법적 이해에 대단한 도움을 주고 있다.

「형사법의 성편향」

-조국 교수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형사법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편향에 대한 법리적 비판을 시도하였다. 조국 교수는 이 책의 발간 이전에도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하여 법률의 해석과 판례의 입장에서 여성적 시각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여러 법률들 중에서도 남성 위주의 시각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형법”을 전공하는 “男性”的 교수들이 이러한 주장을 단행본으로 묶어 내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학을 전공한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저서를 통하여, 한 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건(성폭행 가해자를 21년만에 찾아가 살해한 1991년의 김부남씨 사건, 자신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1992년의 김보은씨 사건)들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비판받고, 재검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계약법」

-이호정 교수

지난해 정년퇴임한 이호정 교수(前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저술한 이 책은 영국의 계약법 내용을 저자의 표현대로 “측량사진사”的 자세로 정확히 서술, 정리하여, 실무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영국 계약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있어서 영국 사법의 올바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역할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우선 영국계약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개념을 대략 17개 정도로 나누어 개념법학적 사고에 익숙한 법률가들로 하여금 영국사법의 중요 법개념에 대하여 익숙하게 한 다음 각각의 법개념과



관련된 실제 케이스를 풍부하게 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개념들을 분명히 익히도록 돋고 있다. 영국법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도 기본적인 법적 사고능력 (Legal Mind)를 갖춘 한국의 법학도라면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국계약법에 대한 분명하고도 깊은 이해를 얻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오쿠보 시로·서승 편, 현대한국의 민주화와 법·정치구조의 변동, 일본평론사, 2003.**」

(大久保史朗・徐勝[編], 現代韓國の民主化と法・政治構造の変動, 日本評論社, 2003)

-한인섭 교수 외

지난 1999년 '현대 한국의 민주화와 법·정치구조의 변동'이라는 주제를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공동연구하기 위한 연구회가 만들어졌다. 같은 해 4월말 서울대에서 개최된 제 1회 공동연구회를 시발로 하여 3년간 진행된 공동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한국학자들의 것을 염두에 놓고 일본에 한국의 법·정치구조를 소개할 목적으로

로 기획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주제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부족하였던 한국의 법·정치구조에 대한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 그 역동적인 전개과정과 풍부한 토론의 주제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일본에서의 한국의 법학과 정치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일간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의 기회에 훌륭한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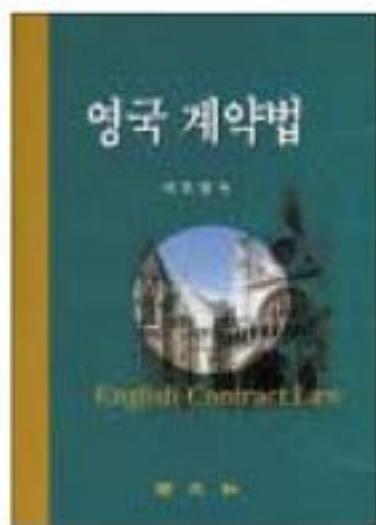
「거창사건 자료집」

-한인섭 교수 외

지난 2003년 3월에 1차적으로 발간된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은 역사적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약 2년여에 걸쳐 자료수집과 분류, 정리를 한 끝에 발간된 자료집은 기간의 장단을 떠나서 수많은 1차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자료집은 연구자들에게 일차 자료의 연구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한편, 허위와 폭력 속에서도 진실은 스스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자는 이 자료집의 발간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극의 재발을 막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간적인 민주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노동법강의」

-남효순교수·이홍재 교수

이 책은 남효순·이홍재 교수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2001년 1학기에 개설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 11기 노동법과정’의 강의내용을 엮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구조종과 노동법의 중요과제’라는 주제로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의 변동과 종료, 노사간의 분쟁, 기타 개별·집단적 노사관계상의 문제 등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노력이 한 권의 책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인물과 전기」

-최종고 교수

역사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개개 인물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는 저서로 한국인물전기학회 회장인 저자의 노고가 묻어나는 책이다. 한국의 전통과 한국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잊혀져 가는 역사를 바로 세우려 하며 비단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연구도 잊지 않고 있다. □

임보미 기자



KAL기 참사, 故 김도연(金度演)군 유족 서울대에 거액 장학금 출연



故 김도연군 (서울법대 88학번)



장학금을 회시하고 법대교수진과 기념촬영을 한 故 김도연군의 부친 김의영씨 내외

지난 97년 괄 KAL기 참사로 사망한 김도연 군(법대 88학번)의 부친인 김의영씨가 서울대에 6억원의 장학금을 <김도연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다. 김도연 군은 1997년 8월 6일 친구들과 휴가 차 괄으로 여행을 가던 도중 발생한 괄 KAL기 사고로 사망하였다. 당시 26세였던 그는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도연 군은 영어는 물론, 독어, 불어, 일어에 능통했던 인재로서, 국제법을 전공하여 장래가 크게 촉망되는 학생이었으며, 국제적으로 정평있는 제섭모의재판에 패널로 참여한 재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서울대 상대 12회 졸업생으로 산업은행에서 근무했던 부친 김의영씨(67세)는 “나의 외아들 김도연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학교를 생각합니다”라며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닦고, 거액의 장학기금을 회사하여 김도연 군의 후배들의 면학을 돋기로 했다. 사실 김씨는 몇해 전 생전에 아들이 소장하고 있던 1,000여권의 장서를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에 기증했었다. 그래도 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던 김씨는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보상금에 사채를 더해 6억원을 만든 뒤,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지난해 6월 서울대에 기부의사를 밝혔다.

에 ‘김도연 장학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2003년 1학기에 조두연 외 학부생 7명과 안준홍 외 대학원생 3명 등 총 12명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앞으로 국제법 전공자를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김도연 장학금’의 수혜를 받게 된다.

3월 25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김의영씨를 초청해 위로하고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서울대 법대 안경환 학장은 “명석했던 김도연 군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슬픔을 누르고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뜻을 잊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추모와 함께 감사를 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뜻을 기리는 좋은 방식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기부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모범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박준엽 기자

서울대는 김씨의 뜻을 받아들여 이 장학금



강의실이 확 바뀌었어요. - 어느 독지가의 서울법대 사랑이야기

2003년 1학기를 맞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 중 하나인 15동 401호의 크게 변화된 모습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자칠판과 천동스크린의 설치, 그리고 산뜻해진 교실 인테리어로 이전의 60년대 식의 낡은 강의실 분위기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401호에서 수강하는 많은 학생들은 갑자기 어떻게 강의실이 이렇게 변하였을까 궁금해 하면서도 폐쇄적인 공간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했다.

강의실이 변하게 된 이유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지만 사실 15동 401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한 독지가의 후원금 덕분이었다. 그가 후원을 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는 후원인이 이름을 밝히기를 극구 사양하였기에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아름다운 기부로 거의 모든 법대생이 수강하는 강의실 중 하나를 변화시켰다.

법과대학 건물(15동)에서 법학 전공생들이 수강하는 강의실로 4개의 대형 강의실이 있다. 이번에 개선된 강의실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 강의실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강의실의 한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강의하는 교수와 칠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좌석도 있는가 하면, 칠판이 너무 오래되어서 뒷부분에 앉은 학생들은 칠판의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심지어 조명이 어두워서 수업을 듣기에 불편한 강의실도 있다. 서울 법대 학생들은 자신

들이 외부에서 평가받는 것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학문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구시대의 억지인 것이다. 401호 강의실 역시 지난 학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다른 강의실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강의실 개선은 법과대학의 기존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법과대학 학부생들이 직접 느끼는 다른 교실과 401호와의 차이는 대단히 커졌다. 02학번의 박준엽 학생은 “다른 오래된 강의실에 비해 401호에 들어갈 때는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서 “401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뒤에 앉아도 잘 보이고, 수업 도중에 인터넷 상의 수업게시판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선배의 후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모범사례라고 하겠다. 아직도 법과대학에는 3개의 열악한 강의실이 남아 있고 그 외에도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 앞으로 국제 사회에 걸맞는 인재양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교육 환경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401호의 변화는 앞으로 법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부여가 가능한 것이다. □

이우열 기자



세계 저널의
학사일기
세계 저널의
인재 선발
세계 저널의
기원축제

성명을 밝히기 사용한 독지가의 괄적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세계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재단입니다.

서울법대 동문,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및 기업, 단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서울법대가 진정한 법정의 실현 및 법학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세계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드는 재단입니다.

한 순간의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돈을 내고 마는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모교발전 혹은 대한민국 법학 발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기부문화의 정신 속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진정한 법정의를 통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단순한 구호나 학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정신의 구현을 위한 바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法文化 실현과 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 모범적인 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을 통해 공익재단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부자분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소중하게 사용하여 영원히 그 뜻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 하는 일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법학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법 제도와 법 실무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악한 법학연구 환경 및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갑니다.

1. 법학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2. 한국법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3. 법학 도서관 등 법학정보화 사업 지원
4. 법제도 및 법실무 개선을 위한 사업
5. 학계와 실무계의 학술교류 및 발전을 위한 사업
6. 법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約定書

성명(기관명)			
직장명	직위 :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휴대전화 :	e-mail :	
주소 (우편을 발송지)	□□□ - □□□		
본교외의 관계 (해당란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학년도 : 학생성명 : 대표자성명 :	입학년도 :

약정금액	일금	원 (₩)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농협 서울대지점 079-01-434831 예금주: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input type="checkbox"/> 지로입금	조흥 서울대지점 873-03-005786 예금주: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CBS)	지로번호 6308816(연락주시면 지로용지를 송부해드립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납부기간 (해당란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일시납부	년 월 일까지 납부
	<input type="checkbox"/> 분납납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납부
참여내용	기금용도	() 법학발전 () 환경개선 () 장학기금
		() 도서 () 연구소 () 위임 기타
	부여하실 기금명칭(단, 약정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및 지출용도	
기금명칭 :	지출용도 :	

본 재단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세법상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일년 내내 좋다! 가족 모두 좋다!

365일 가족 휴양 천국 - 휘닉스파크

이제 막 깨어나는 꽃들의 향기 가득한 봄.

태기산 숲 속의 바람이 시원한 여름.

화려한 하늘과 빨간 단풍이 유혹하는 가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눈빛 세상의 겨울까지

일년내내 새로운 즐거움을 드리는 휘닉스파크로 오십시오!

국내 최고 수준의 스키월드, 잭 나들라우스가 설계한 골프클럽 등

휴양과 레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일년 내내

가족 모두에게 가장 멋진 휴식과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휘닉스파크
PHOENIX PARK

문의전화: 02.508.3400 www.phoenixpark.co.kr